

## 1. ‘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’ 확대 시행

교육부 | 민원조사담당관 (☎ 044-203-6431)

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 ‘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’의 민원 종류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\* '16.11.29. 시행

- 팩스민원 종류를 기존 졸업증명 등 25종에서 ‘초·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(인적 사항) 정정 신청’, ‘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’ 등 2종을 추가하여 27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기존 중등과정에만 적용하던 ‘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’을 초등과정에서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[참고] 교육부 홈페이지>정책홍보>보도자료>‘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’ 확대 시행

### ‘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’ 확대 시행

- 추진배경 민원인이 ‘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’ 확대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교육민원서비스 이용
- 주요내용 ① 팩스민원 2종 추가(25종 → 27종)  
② 팩스민원 범위 확대(1종)
- 시행일 2016년 11월 29일

## 1.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

| 국토교통부 | 토지정책과 (☎ 044-201-3402)

토지·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하거나,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-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, 토지·주택의 분양계약,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.

- 앞으로는 아파트, 오피스텔, 택지·산업용지 등 공급(분양) 계약\*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하도록 하여, 다운계약, 업계약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\* 30호 이상 단독주택, 30세대 이상 공동주택,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·다세대 주택, 30실 이상 오피스텔, 분양 면적 3천㎡ 이상 건축물의 분양계약 등

|참고|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입법예고

###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
-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
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최초 분양계약,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까지 확대
- 시행일 2017년 1월 20일

## 2.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

| 국토교통부 | 토지정책과 (☎ 044-201-3402)

부동산 거래를 허위신고한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받게 됩니다.

-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다단계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, 부동산 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.
-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,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과태료의 50%를 감경받게 됩니다.

[참고]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입법예고

###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

- 추진배경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을 통한 자발적 신고·시정 유도
-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
  - ①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전액 면제, 조사 개시 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50% 감경
- 시행일 2017년 1월 20일

### 3.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

| 국토교통부 | 토지정책과 (☎ 044-201-3402)

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-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당사자간 은밀한 거래(현금거래 및 이중계약 등)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므로,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####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

- 추진배경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
-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
- 시행일 2017년 6월 3일

## 4.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

| 국토교통부 | 주거복지기획과 (☎ 044-201-3359)

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,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.

-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\*을 충족하는 가구로, '17년 기준중위소득('16년 대비 1.7% 상승)은 4인가구 기준 192만원\*\*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.

\*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【부양의무자 :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)】⇒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

- 또한,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'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'16년 보다 2.54%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
**2017년도  
주거급여  
선정기준 및  
최저보장수준  
인상**

- 추진배경 주거급여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
- 주요내용 ①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: 2016년 대비 1.7%상승  
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: 2016년 대비 2.54%상승
- 시행일 2017년 1월1일

## 5. 공공임대주택 입주·재계약 기준 개선

국토교통부 | 주거복지기획과 (☎ 044-201-4740), 공공주택정책과 (☎ 044-201-4580), 행복주택기획과 (☎ 044-201-4522)

공공임대주택(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 및 행복주택)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.

- 공공임대주택(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 및 행복주택)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.
-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고,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이 일부 조정됩니다.
  - 영구·매입·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,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,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(2,500만원 이하)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- 행복주택은 신혼부부·고령자·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, 대학생·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합니다.  
  
또한,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·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,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.
  -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기준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·탈북자 등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며,
  - 종전 매입·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.
  - 행복주택 신혼부부·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(100%→120%)하던 규정은 폐지됩니다.

- 현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,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됩니다.
- 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.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다만,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,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·자산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.
- 또한,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-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%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.

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

###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기준 정비

- 추진배경 공공임대주택 입주·관리의 선순환구조 마련
- 주요내용
  - ① 입주기준(소득·자산) 마련
    - 소득불문자에 대한 소득기준 신설,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기존 소득기준 일부 조정
    - 부동산·자동차 외에 금융 및 기타자산까지 포함 및 자동차 별도 관리
  - ② 재계약기준(소득·자산) 마련
    -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.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기준 총족
- 시행일 입주기준(2016년 12월 30일), 재계약기준(2017년 6월 30일)

## 1.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

법무부 | 법무심의관실 (☎ 02-2110-3799)

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, 과징금의 징수를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※ '17. 1. 7. 개정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시행 예정

-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하여야 했으나, 2017. 1. 7.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,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  -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, 과징금은 최대 3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(잠정, 시행령 법제처 심사 완료).
  - 다만,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

[참고]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검색

###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

- 추진배경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 도모
- 주요내용 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 도입(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)  
②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 도입(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)
- 시행일 2017년 1월 7일(동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)



## 2.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

| 법무부 | 법무심의관실 (☎ 02-2110-3733)

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계획입니다(17. 5. 30. 시행).

-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. 이에 분쟁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.
  -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(필수적 설치)와 시·도(임의적 설치)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.
  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조정절차, 처리기간(60일),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.
-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|참고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

###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

- 추진배경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
- 주요내용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
②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, 처리기간(60일), 조정서의 집행력 부여 등 규정
- 시행일 2017년 5월 30일

### 3.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

| 법무부 | 법무심의관실 (☎ 02-2110-3733)

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.

-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과태료 납부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또한,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(현행 100분 5)으로 경감되고,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됩니다.
-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시행됩니다.
  -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,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.

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과태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,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참고]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질서위반행위규제법

개정  
질서위반  
행위규제법 시행

- 추진배경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
- 주요내용
  - ① 과태료를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
  - ②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 완화(5% → 3%)
  - ③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규정
  - ④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도입
- 시행일 2017년 6월 3일

## 4.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

법무부 | 출입국심사과 (☎02-2110-4045), 이민정보과 (☎ 02-2110-4096)

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, 2017년 3월부터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범 운영하고, 2017년 3월부터는 전국 공항·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*[참고]** 법무부 홈페이지>법무뉴스>보도자료>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>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

###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

- **추진배경**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민 불편사항 해소
- **주요내용** ① 경찰청 보유 국민의 지문 정보 연계  
②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
- **시행일** 2017년 3월(잠정 시스템 구축 중)\*  
※ 시스템 구축 완료(2016년 12월), 시험운영(2017년 1월 ~ 2월)

## 5.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

| 법무부 | 출입국심사와 (☎02-2110-4045), 이민정보과 (☎ 02-2110-4096)

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리스트,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.

- 지금까지 테러범,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국내 입국은 차단할 수 있었으나,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는 없어 국민의 안전이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.
-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항공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.
  -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항공사 및 시범운영공항을 확대하고, 2017년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사전확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이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국민과 항공기,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참고] 법무부 홈페이지>법무뉴스>보도자료>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참고자료(160212) /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(160313)>항공사 탑승방지의무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

###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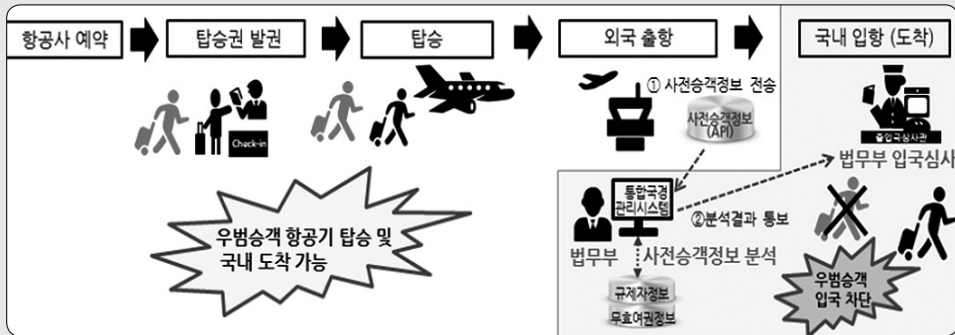
- 추진배경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
- 주요내용 ①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정보를 미리 받아 확인 후 우범승객은 탑승불가 통보  
② 운수업자는 탑승불가된 승객에 대하여 탑승권 발권 차단 등 탑승 방지
- 시행일 2017년 4월(잠정, 시스템 구축 중)\*  
※ 시스템 구축 완료(2016년 12월), 시험운영(2017년 1월 ~ 3월)

## 참고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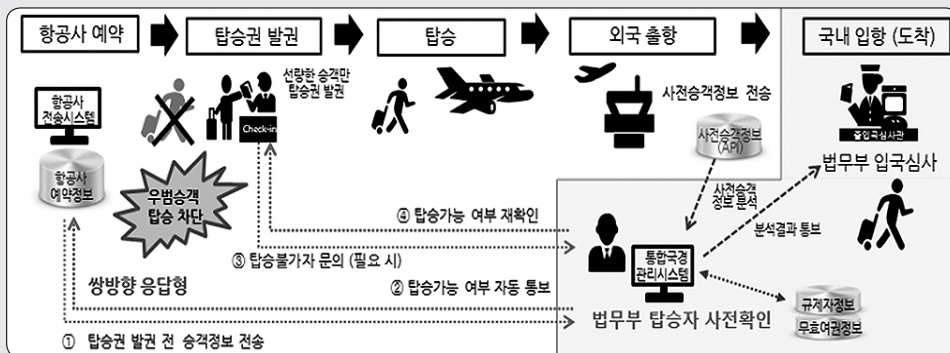
##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

| 법무부 | 이민정보과 (☎ 02-2110-4096)

- 기존 시스템은 테러범, 분실여권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국내 입국은 차단가능하나, 항공기 탑승 및 국내 도착까지는 방지할 수 없어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



-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사전확인 후 입국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항공사에 '탑승불가'를 통보하여 탑승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 안전 확보



## 1.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

| 행정자치부 | 변경제도 추진단 (☎ 02-2100-3838)

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(출생일자, 성별 등)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
  -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·신체, 재산,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
  -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[참고] 행정자치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

###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

- **추진배경**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,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·신체, 재산,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
  -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변경 적합 여부 결정
- **시행일** 2017년 5월 30일

## 2.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·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

| 행정자치부 | 민원서비스정책과 (☎ 02-2100-4087)

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·면허증을 가까운 시·군·구 전국 어디서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서민들의 신속한 취업·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원거리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관련 자격·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시간적·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.
  - 지난 2016년 12월 22일부터 전국 시·군·구에서 발급 신청·접수와 신청 시·군·구에서 자격·면허증의 팩스사본 수령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·시행하고 있습니다.
- 2017년 5월부터는 전국 시·군·구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자격·면허증 원본 수령이 가능합니다. 또한 재발급에 대해서는 「민원24」를 통한 온라인 즉시 발급서비스도 시행 됩니다

### 생활자격·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계획

- 추진배경 전국 어디서나 생활자격·면허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개선하여 취업·경제 활성화 지원
- 주요내용 생활자격·면허증을 ‘원하는 곳’에서 ‘원하는 방법’으로 발급 받도록 개선
  - (현행)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
  - (개선)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·교부 및 재발급은 온라인 즉시발급 가능
 ※ 개선대상 자격·면허(8종) : 요양보호사, 장례지도사, 안마사, 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(보), 가족인공수정사, \*조리사, 이미용사(\*온라인 발급만 개선·시행)
- 시행일 2017년 5월  
(※ '16.12.22~'17.4월까지는 자격·면허증 팩스사본 수령만 가능)

### 3.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

#### (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, 지문 이용한 신분확인 등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)

| 행정자치부 | 주민과 ☎ 02-2100-3837

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,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등록 방법 개선,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 개선 등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(‘17.1.1.시행)

제3자의 부정발급,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·발급·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\* 이 서비스는 읍·면·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주민등록증 지문등록 방법이 개선되고,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 등록하던 불편이 앞으로는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.
- 등·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,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.

가정폭력 피해자(성폭력 포함)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.

-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에 해당하여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
- 이로 인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,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.



## 행정자치부

-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등·초본 열람·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입증서류가 현재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고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,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하여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.

###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, 지문 이용한 신분확인 등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

- 추진배경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가 거주불명으로 처리되는 불편 해소, 잉크 이용 지문등록에 따른 신체접촉 등 민원 해결, 국민이 자주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
- 주요내용
  -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·재발급하는 경우 진행단계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
  - ② 읍·면·동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신청할 때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
  - ③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 등록 가능
  - ④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에서 제외되는 근거 마련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## 1.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

| 외교부 | 여권과 ☎ 02-2002-0179

해외에서 여권신청 시 사진촬영부터 서류제출까지 한 번에 재외공관에서 해결하는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더 많은 재외공관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여권사진 촬영과 간이서식 사용을 할 수 있었으나, 2017년 1월 2일부터 15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증명사진 촬영 환경이 열악한 해외의 재외공관에 디지털 여권사진촬영시스템을 구축하여, 전자여권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재외공관에서 무료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부처간 개인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출 서류를 줄이고 종이 여권신청서의 작성항목을 최소화하여 더욱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간편여권신청제 확대 시행 계획

- 추진배경 더 많은 재외공관에서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 ① 디지털 여권사진촬영시스템 구축(84개→157개 재외공관)  
② 제출서류 및 종이 여권신청서 작성항목 최소화(84개→157개 재외공관)
- 시행일 2017년 1월 2일

## 2.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

| 외교부 | 영사서비스과 (☎ 02-2100-8374)

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의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에 관한 이중제재가 해소되어 행위능력 회복 시 즉각 해외 이주알선업 등록이 가능해집니다.

- 현행법하에서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회복되더라도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위반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이중제재가 해소되게 됩니다.

###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

- 추진배경 유명무실한 거주여권 폐지 및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 완화
- 주요내용
  - ① 거주여권 폐지 및 현지 이주자 해외 이주신고 의무 부과
  - ②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행위능력 회복시 즉각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가능
- 시행일
  - ① 유명무실한 거주여권 폐지 : 2017년 12월 21일
  - ②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 완화 : 2016년 12월 20일

### 3. 주재국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 공증 신청 가능

| 외교부 | 영사서비스과 (☎ 02-2100-8173)

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재국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 공증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재외공관 공증 신청 시 여권 등 국내신분증 제출을 필요로 하였습니다.
  -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, 분실 등의 사유로 국내신분증을 미소지한 경우에도 주재국 신분증으로 재외공관 공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|참고| 의안정보시스템>의안현황>가결>재외공관공증법일부개정법률안

####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 개정

- 추진배경 재외공관 공증제도 개선·보완
- 주요내용
  - ①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주재국 신분증도 신원확인 수단으로 추가
  - ② 재량적 촉탁거절에 대한 이의절차 도입
  - ③ 대한민국 국가기관 요청 문서확인인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직접조회
- 시행일 2017년 3월 21일

## 1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절차 개선

| 해양수산부 | 해양정책과 (☎ 044-200-5226)

‘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’ 변경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(‘17.3시행)되어 사후활용계획의 신속한 변경을 통한 박람회장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에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사후활용계획 변경시 관계부처 등 협의 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위원회 (위원장 국무총리)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
  -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만으로 ‘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또한, 관계기관 등의 협의기간을 단축(현행 20일 ⇒ 개정 14일)하여 사후활용계획의 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
**[참고]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

###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

- **추진배경**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촉진 등을 통한 박람회장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해 사후활용 변경 절차 개선
- **주요내용**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만으로 가능토록 하여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사후활용 개선절차의 효율화
- **시행일** 2017년 3월

## 2. 선박출입신고 등 항만민원신고 창구가 단일화됩니다.

| 해양수산부 | 항만운영과 (☎ 044-200-5784)

기관별 분산·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 됩니다.

- 3개 지방청 및 4개 항만공사로 분산·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\*(Port-MIS)이 '17년 2월 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.

\* 전국 항만의 선박의 이동 및 화물의 반출입에 관련된 민원 및 행정업무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으로 지방청(부산·인천·여수) 및 항만공사(부산·인천·울산·여수광양)운영

- 선박 입항항만 및 업무별로 해당 지방청(항만공사)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였으나, 통합센터 구축으로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 됩니다.

- 또한, 무료대용량민원신고(ebXML\*) 체계를 도입('17년 말)하여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\* 중계망(유료)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, 인터넷기반 무료대용량 신고지원 표준 전자문서

###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사업 추진

- 추진배경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막힘없는 해운항만물류 정보 서비스 체계 마련
- 주요내용 Port-MIS 등 7개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민원신고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, 공공정보 개방 활용 기반마련 등 항만민원서비스 개선
- 시행일 2017년 2월(예정)

## 1. 환경기업,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

| 환경부 |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(☎ 032-560-7861)

국내 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(R&D)부터 실증실험,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One-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2017. 6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.

- 그동안 국내 환경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실증실험 실적확보 등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최초 실증실험 중심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- 또한, 연구단지는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체계적·전문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두할 있도록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초기 입주기업(1~3년)은 임대료·사용료 감면(30~50%), 실증실험 우선지원, 실험분석료 할인(50~70%) 등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|참고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([www.keiti.re.kr](http://www.keiti.re.kr))>주요사업>환경산업 육성

###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개요

- **위치**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접부지
- **기간** '13~'17(5년), '17.6월 개소예정
- **총사업비** 1,464억 원(국비 100%)
- **면적** 부지면적 18만㎡, 연면적 44천㎡
- **주요시설** 연구지원시설, 파일럿테스트, 테스트베드, 시제품생산지원시설 등



## 2.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·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

| 환경부 | 자원재활용과 (☎ 044-201-7383)

소비자의 현재 물가상향을 반영하여 보증금액을 현실화 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  
입니다.

- 지난 22년간 빈병 보증금은 현재 물가와 동떨어지게 인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.
  - 2017년 1월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 40원→100원, 맥주병 50원→130원으로 인상  
됩니다.

\* '17. 1. 1 이후 출고·수입되는 제품에 적용(이전 빈병은 기존 보증금 반환)

- 아울러,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·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 
색상이 변경됩니다.

\* (예시) 크기-150% 이상 확대, 색상-붉은색 등

|참고|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환경정책>자원순환

### 빈용기보증금액 인상 및 재사용표시 변경

- 추진배경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 
관한 법률」 개정('15.1)
  -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 인상
  - 「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·  
후 빈병구분
- 주요내용 ① 빈용기보증금액 인상(소주40원→100원, 맥주50원→130원)  
②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(150%이상 확대, 붉은색 등)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

### 3.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

| 환경부 | 화학안전과 (☎ 044-201-6832)

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.

- 유해화학물질 운반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했으나, 2016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.
- 단,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

[참고]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현행법령>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

####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

- 추진배경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
- 주요내용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으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 가능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(시행잠정, 개정안 행정예고중)

## 1.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

| 인사혁신처 | 인재정책과 (☎ 044-201-8204)

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의 일부 과목이 달라집니다.

-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‘헌법’ 과목이 추가됩니다.
  - 현재 제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검사(PSAT)로, 새로 추가되는 헌법시험은 Pass/Non-Pass 제로 60점 이상인 경우 Pass가 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7급 공채 필기시험의 ‘영어’과목이 ‘영어능력검정시험’으로 대체됩니다.
  - 수험준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, 5급 공채 및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과 동일한 기준점수\*를 적용하게 됩니다.

\* TOEIC 700, TOEFL PBT 530, TEPS 625, G-TELP 65(Iv.2) 등

[참고] 인사혁신처 홈페이지>분야별정보>법령정보>입법/행정예고>「공무원임용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」  
일괄 입법예고('15.2.24)

### 시험과목 개편

- 추진배경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직무능력 중심 채용 등
- 주요내용 ①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추가  
②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
③ 6급이하 공채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## 공정거래위원회

# 1.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("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") 운영 개시

| 공정거래위원회 | 소비자종합지원팀 (☎ 044-200-4912)

상품·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2017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.

- 동 포털은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·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맞춤형\*으로 제공하고 기관 별·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\*\*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

\* 상품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,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, 소비자가 행복드림에 상품 구매 사실을 등록하면 사후 위해 발생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 및 피해구제 안내

\*\* 행복드림과 피해구제기관을 연계하여 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)을 통해 상담접수, 피해구제 신청 및 결과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

- '17년도에는 총 33개 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, 향후 90개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.

|참고|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>공정위뉴스>보도>법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

###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

- 추진배경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
- 주요내용 종합적인 상품·안전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통합창구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
- 시행일 2017년 1월

## 2.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

| 공정거래위원회 | 가맹거래과 (☎ 044-200-4637)

업종별·가맹본부별·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가 개시됩니다.

\* 가맹희망플러스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franchise.ftc.go.kr>

- 지금까지는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열람하여 비교·분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-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,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맹희망플러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.

가맹희망플러스는 ‘어느 업종’의 ‘어떤 브랜드’를 창업할지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참고]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>공정위뉴스>보도>법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

###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

- 추진배경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및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 예방
-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업종별·가맹본부별·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정보를 손쉽게 비교해서 업종·브랜드를 결정하는데 도움
-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

## 국민권익위원회

### 1.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

| 국민권익위원회 | 행정심판총괄과 (☎ 044-200-7817)

신속·공정한 권익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「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」를 제공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우편·방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제는 청구부터 진행상황,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청구사례, 처분사례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결례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지식서비스도 제공합니다.

|참고|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홈페이지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

####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

- 추진배경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 개선 및 국민 권리구제 강화
- 주요내용
  - ① One-Stop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
\* '13년 6개->'14년 15개->'15년 21개->'16년 21개(누적 63개 기관)
  - ② 행정심판 지식DB(재결례, 청구사례 등) 구축·개방(약35,000건)
- 시행일 2017년 1월(16년 구축 21개 심판기관)

